

『비전 2030 - 함께가는 희망한국』

-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보고서-

이 자료는 2006년 8월 31일 발표된 『비전2030 - 함께가는 희망한국』의 전문입니다. <편집자 주>

- 정부는 8. 30(수) 180여명의 국무위원, 국정과제위원,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'비전 2030 보고회'를 개최하여
 - '비전 2030 - 함께가는 희망한국' 시안을 확정·발표하였음
- '비전 2030'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으로서
 -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 우리의 노후,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수립된 것임
- 향후 정부는 '함께가는 희망한국' 건설을 위해 여론수렴을 거쳐 비전 20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

< 비전 2030 보고회의 개요 >

- 일시 및 장소 : '06. 8. 30(수),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(3층)
- 주관 : 정부·민간 합동작업단
- 참석자 : 국무총리, 감사원장, 국무위원, 민간전문가 등 총 180여명
- 안건 : 「비전 2030 - 함께가는 희망한국」

【 비전 2030의 의미 】

①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을 향한 중대 기로에 직면

-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2008년경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
 - 그러나 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/3 수준,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
- 또한 저출산·고령화,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
 - 집 문제·사교육비에 시달리고, 애 낳기 겁나고, 노후도 불안
 -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
 - 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될 가능성

② 이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 전략 필요

- 복지 없이는 성장 없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음
-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
 - 미래에는 사람이 경쟁력, 복지투자는 사람을 키우는 투자
 - '물적 자본 위주 재정'에서 '사람 중심 재정'으로 전환

◦ 경제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

- 이대로 가면 미래는 없음, 동반성장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

③ 「비전 2030 - 함께가는 희망한국」은 오랜 작업 끝에 내놓는 국가 장기종합전략

- 비전 2030은 6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내놓은 결과
-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,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서 희망한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중점

④ 비전 2030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

- 미래 준비는 국가의 책임, 할 일은 하는 정부,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, 책임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
 - * 미리 준비하지 못해 지금 저출산, 연금문제 등에 직면
- 저출산 문제 : '83년 이미 출산율 2.08명 → 현재 세계 최저 1.08명
- 국민연금 : 최초설계 잘못, '90년대 후반부터 문제제기 → 논의만 무성, 해결책 담보
- 일본,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, 인도 등도 10~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통해 미래 대비
 - * 일본 : A New Era of Dynamism(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), 중국 : 2020년 全面的小康國家 등

⑤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비전 2030 성공의 관건

- 비전 2030! 불가능한 일은 아님
-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 필요

【 주요 특징 】

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

- 현재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~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종합전략
-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미래 대비 관련 논의를 포괄·종합

② 제도혁신을 전제로 투자 확대

- 제도혁신이 없는 투자 확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
- 잘못 설계된 복지제도 유지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재정을 투입해도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 수준
 - * 재정위험 사전 제거 : 국민연금, 직역연금 개혁 등
 - 효율성 제고 :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

③ 복지투자는 확대되나, 2030년에 현재의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

- 복지지출*은 2020년경에 '01년 미국·일본 수준, 2030년에 '01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
 - *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(중앙정부·지자체 복지지출+사회보험)
- 경제분야 투자는 민간역할 강화를 통해 지속 추진

④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비전 2030 추진

- 2010년까지는 세금인상 없이 지출구조조정, 비과세·감면 축소 및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충당
-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 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

【비전 2030 주요내용】

1. 추진 배경 및 경위

- (상황인식) 현재 우리는 저출산·고령화, 저성장, 양극화 등 장기·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, 기로에 위치
-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前 10~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
 - * 생산인구는 2016년,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
 -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
- 그러나 경제·사회·문화를 망라한 제도혁신의 밑거름을 설계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
- (비전 수립의 필요성)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·종합적 대책을 수립, 체계적인 대응 시급
- 비전 제시와 함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
- (비전 수립 과정)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「비전 2030」을 수립
-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 시작
 - * 역동과 기회의 한국('03~'04),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('05~'06) 등
- '05. 6월부터 「비전 2030」 수립을 본격 추진
 - 60여명의 전문가로 민간작업단 구성('05.7)
 - 설문조사('06.1),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('06.8) 등 의견수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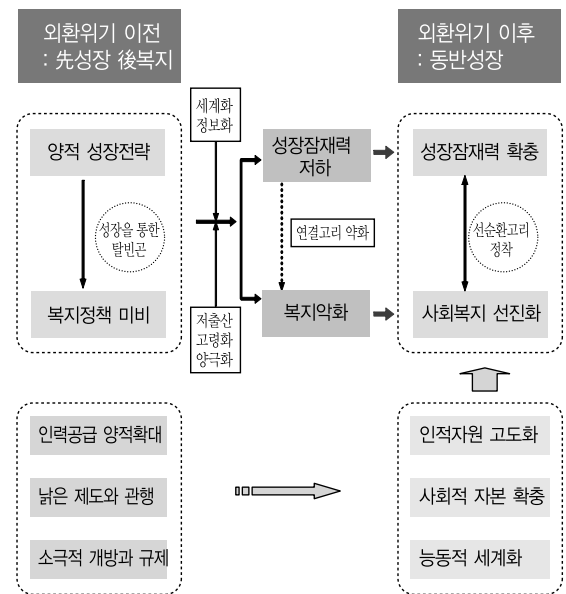
2.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

- (패러다임 전환) '先성장 後복지'의 기존 패러다임으로 는 성장 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도 곤란

⇒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'동반성장'으로 전환

	기존 패러다임	동반성장 패러다임
• 추진 배경	탈빈곤, 성장과 분배의 고리 작동	양극화 심화, 성장과 분배의 고리 약화
• 정부 역할	성장에 집중	성장과 복지의 조화
• 성장 전략	양적 투입 위주·불균형 성장, 정부 주도	혁신주도형·균형 성장, 시장 주도
• 복지 전략	가족·공동체에 의존, 구조적 복지	정부의 역할 제고, 미래를 위한 투자
• 투자 중점	物的 자본	人的·社會的 자본*

* 사회적 자본 :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, 개방성 및 이를 촉진하는 제도·규범·네트워크 등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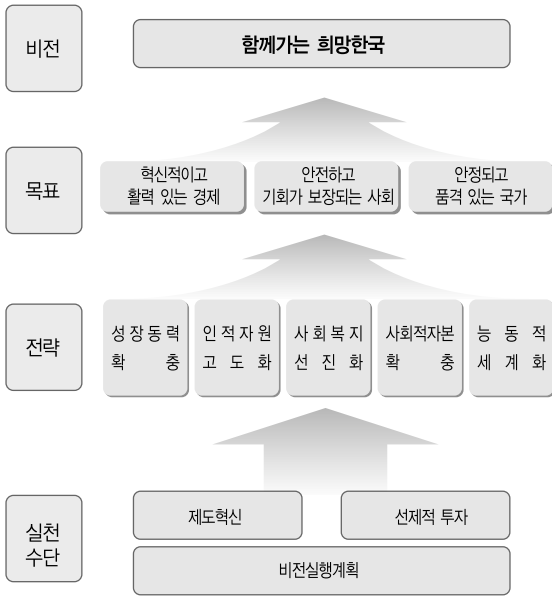


3. 2030 한국의 구상

■ (비전) 「함께가는 희망한국」

-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국민 누구나가 '희망'을 가지는 '기회의 나라'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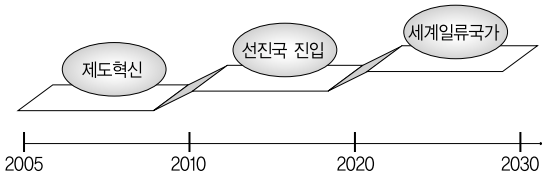
〈 비전 2030 체계도 〉



4. 비전 실현을 통한 미래의 모습

■ 비전 실현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 달성

- (제도혁신)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경제·사회 제도의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
- (선진국 진입)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
- (세계 일류국가)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



■ 1인당 GDP와 삶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

- 1인당 GDP는 '30년 4만 9천불로서 현재의 스위스 수

준 도달

* 잠재성장률(장기재정전망팀 추계) '06~'10년 : 4.9%, '11~'20년 : 4.3%, '21~'30년 : 2.8%

- 삶의 질 순위는 '30년 10위로서 현재의 미국 수준 추월

지표명	'05년	'10년	'20년	'30년	비 고('05 기준)
• 규모 GDP ¹⁾ (십억불)	788 (788)	1,122 (1,262)	1,824 (2,567)	2,406 (4,145)	· 미국 12,486 일본 4,571 · 영국 2,201 이태리 1,766
• 1인당 GDP ¹⁾ (천불)	16 (16)	23 (26)	37 (51)	49 (84)	· 스위스 50 미국 42 · 일본 36 프랑스 34
• 국가경쟁력(순위, IMD)	29	20	15	10	· 미국 1위 싱가포르 3위 · 스위스 8위 일본 21위
• 삶의 질(순위, IMD)	41	30	20	10	· 호주 1위 스위스 4위 · 미국 14위 일본 35위

1) 2005년 불변가격 기준, ()안은 경상가격 기준

5. 달라지는 미래 국민생활의 모습

■ 계층별·연령별 미래 모습

* 숫자는 ('05) → ('10) → ('20) → ('3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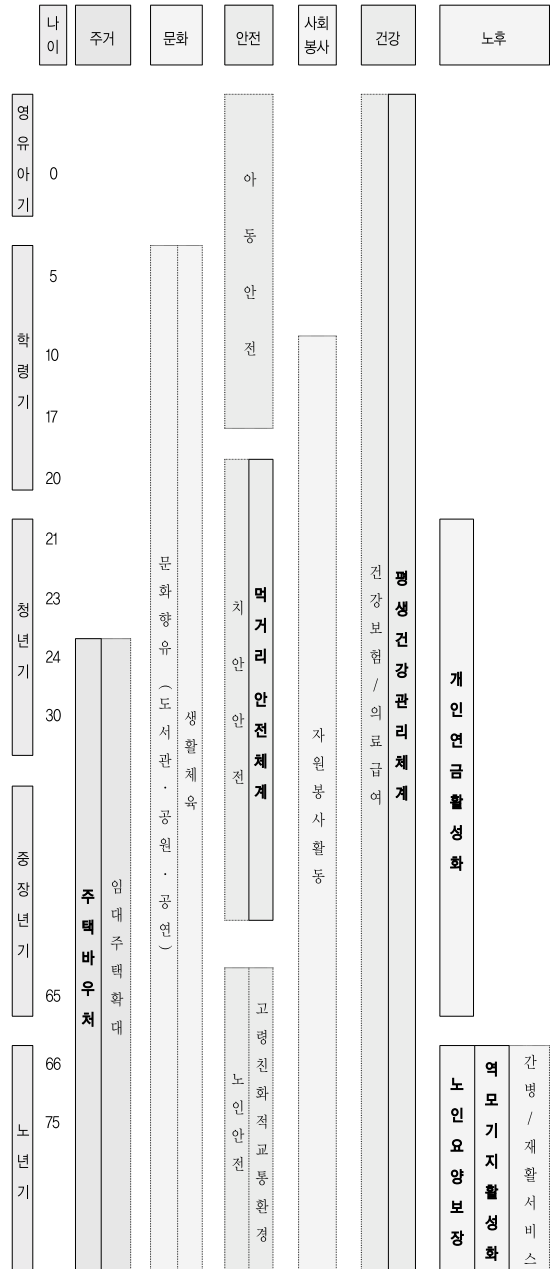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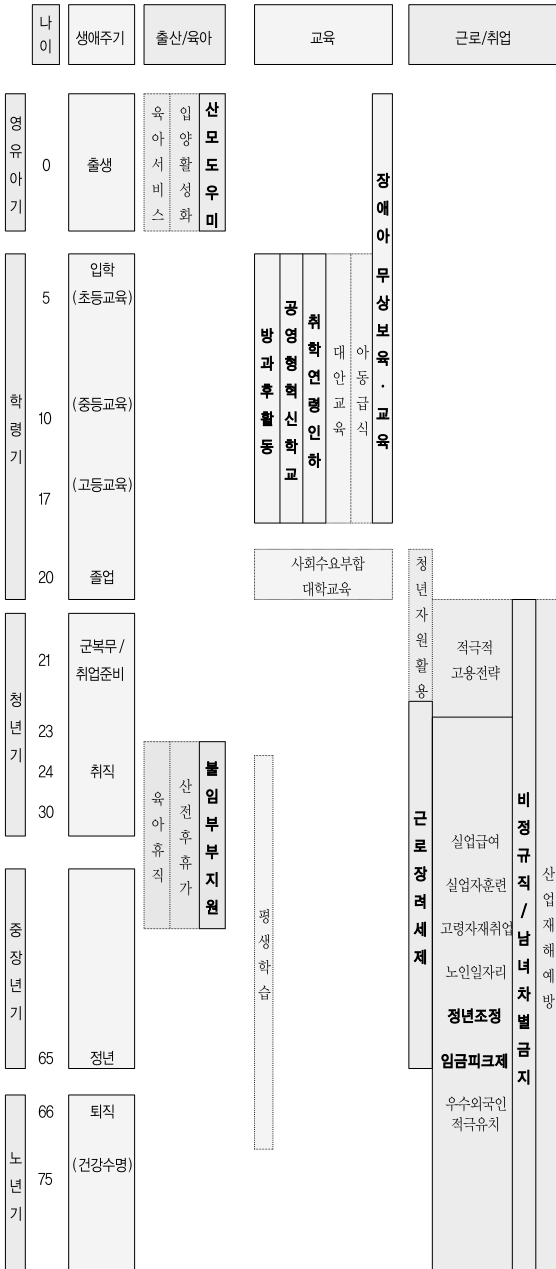
	20대	30대	40~50대	60대 이상
전 국 민				노인, 2/3가 연금혜택 받는다 * 연금수급률 17 → 30 → 47 → 66%
				치매·중풍노인, 사회에서 책임진다 *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1 → 35 → 70 → 100% * 장기요양병상수(인구천명당) 0.5 → 1.5 → 3 → 4개
				집 걱정, 병원비 걱정,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
	* 건강보험 보장률 66 → 72 → 80 → 86%			
	*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4 → 10 → 15 → 20%			
	* 삶의 질(IMD, 60개국) 41 → 30 → 20 → 10위			
	* 공공임대주택 비율 51 → 101 → 16 → 16%			
	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			
	* 국민문화향유율 ('03) 62 → 70 → 90 → 95%			
	* 공공도서관 12만 인구수 9만 → 5만 → 4.5만 → 4만			
투 명 하 고 상 부 상 조 하 는 사 회, 안 심 하 고 살 수 있 다	* 청렴도 지수(TI, 159개국) 40 → 25 → 10 → 5위			
	* 자원봉사 참여율 15 → 20 → 30 → 50%			
	* 5대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72.6 → 73 → 75 → 77%			

	20대	30대	40~50대	60대 이상
근로자	고용,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다			
	* 평생학습 참여율 (04 22 → 30 → 40 → 50%)			
	* 고용률 63.7 → 67 → 70 → 72%			
	비정규직,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			
	*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63 → 70 → 80 → 85%			
	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			
	* 산업재해율(재해자수/근로자수) 0.77 → 0.58 → 0.37 → 0.24%			
	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			
	* 연간실근로시간 2,366 → 2,300 → 2,166 → 2,033시간			
	실업, 재기의 기회가 확대된다			
	* 실업자훈련 참여자취업을 50 → 51 → 60 → 65%			
기업인	협력적 노사관계, 대·중소기업간 상생,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			
	*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56 → 42 → 26 → 15일			
	* 기업의 사회적 책임(MD, 60개국) 30 → 25 → 20 → 10위			
	공정한 시장경쟁, 대학연구성과,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			
	* 신학년 지식이전 정도(MD, 60개국) 21 → 15 → 10 → 5위			
	우리 기술과 상품,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다			
	* 부문개발 기술수준일본=100 84 → 94 → 98 → 105			
	* 혁신형 중소기업 1 → 3 → 6 → 9만개			
	* 세계 일류상품 505 → 1,000 → 1,550 → 2,000개			
학생/청소년	우리 아이들,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공부한다			
	*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2 → 30 → 27 → 23명			
	방과후 아이들, 사교육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맡긴다			
	* 방과후 활동 수혜율 32 → 67 → 72 → 75%			
	우리 아이들, 사고없이 안전하게 성장한다			
	* 아동안전사고율(10만명당) 8.3 → 7.3 → 6.0 → 5.0명			
	학교에서 배운 지식,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다			
	* 대학교육 사회부합도(MD, 60개국) 52 → 40 → 20 → 10위			
여성/맞벌이부부	일하는 여성, 남녀차별 없이 능력으로 인정 받는다			
	* 여성권한척도(UNDP, 80개국) 50 → 45 → 30 → 20위			
	아이, 건강하게 낳아 걱정없이 키운다			
	* 영아사망률(천명당) (025.3 → 45 → 40 → 30명)			
	* 육아서비스 수혜율 47 → 65 → 67 → 74%			

	20대	30대	40~50대	60대 이상
장애인	장애인, 원하는 직업에서 자아를 실현한다			
	* 장애인 실고용률 (04 13 → 17 → 25 → 30%)			
	* 취업장애인 월평균소득(상용근로자 대비) 445 → 50 → 75 → 90%			
	신속하고 편리하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			
	* 공공립 장애인 재활병원 1 → 7 → 16 → 32개소			
	더 이상 이동과 정보이용에 불편은 없다			
	*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2.7 → 82 → 95 → 100%			
	*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36 → 50 → 95 → 100%			
저소득층	최소한의 생활, 국가가 보장한다			
	*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(00 23 → 18 → 9 → 0%			
	* 사회복지급여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3,800 → 3,320 → 2,160 → 1,000명			
야어업인	농어업인, 일하기 좋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			
	*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40 → 64 → 76 → 80%			
	규모화·전문화로 농업 경쟁력이 확보된다			
	* 쌀전업농 생산비중 30 → 41 → 60 → 79%			
	* 수산자원량 790 → 880 → 1,000 → 1,000만톤			

■ 비전 2030에 따른 미래둥이 가족의 모습

* 굵은 글씨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거나 도입 추진중인 지원 프로그램



6. 비전 실현방안

- (비전 실현수단) '함께가는 희망한국'의 비전과 전략은 제도혁신 · 선제적 투자와 비전실행계획을 통해 실현

• 제도혁신 · 선제적 투자

- 제도혁신 : 경제 · 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,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
→ 제도혁신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 불가능
- 선제적 투자 :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분야,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
→ 선제적 투자 없이는 바람직한 미래의 조기실현 곤란

〈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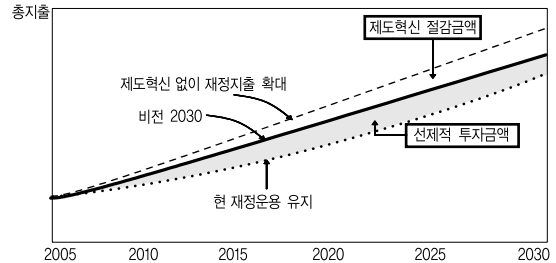
제도혁신	선제적 투자
•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	•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
•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	• 적극적 고용전략(Jobs strategy) 추진
• 학제 개편	•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
• 국민 · 지역연계 개혁	• 보육서비스 · 방과후 활동 확대
•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	• 근로장려세제(ETC) 도입
• FTA 체결 확대	•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

- 비전 실행계획 : 5대 전략별로 정책목표, 실천과제, 지표, 국제비교를 포함하는 실행계획(Vision Action Plan) 수립 · 시행

- (재정투자 방향)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, 제도혁신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소화

-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R&D, 고등교육 부문 투자 강화
-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, 사회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확대

〈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圖式 〉



7. 재정전망

- 추가 재원소요 : 총 GDP의 2% 수준

	'06~'10년	'11~'30년
· GDP 대비 연평균 추가소요	0.1%	2.1%

-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

- ① (2010년까지)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, 비과세 · 감면 축소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
- ② (2011년 이후)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
* 현재의 복지지출수준 유지시 빈곤의 대물림, 노후불안, 출산기피,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통합 저해 및 개인의 불안감 증가 우려

8. 외국수준과 비교한 2030 희망한국의 모습

- 2030년 1인당 GDP는 '05년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복지지출 규모는 '01년 OECD 평균에 도달

• (1인당 GD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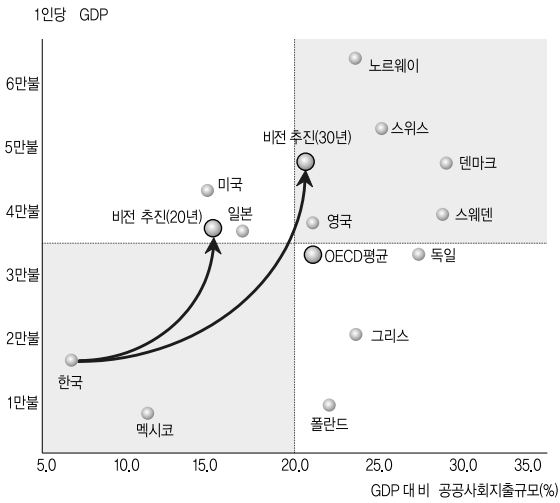
- '20년 37천불('05년 불변가격), '30년 49천불로 '05년 스위스 수준 도달

• (복지지출 규모)

- '06년~'30년간 연평균 9.8%씩 증가하여 '19년 15%('01년 미국 수준), '24년 17%('01년 일본 수준)

도달

◦ '30년에 21%로 '01년 OECD 평균(21.2%)에 이를 전망



* 1인당 GDP('05년 기준 ; IMF, World Economic Outlook('06.4))
공공사회지출규모('01년 기준 ; OECD, Social Indicators('05))